

“축제·접근성 확보 등...발전 전략 수정해야”

◆ 긴급점검 무등산 중심사지구

〈하〉 활성화 방안은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운림동 중심사지구 상가 주차장. 어둠이 내리자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생훈 기자

푸드트럭, 데크길 등 차별화 절실
전세대출 위한 홍보·마케팅 시급
전문가 “발전 전략 수정 불가피”

있는 장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의회 노진성 의원은 “푸드마켓과 푸드트럭 등을 동원해 장년층을 위한 음식뿐 아니라 젊은층도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등산 중심사 상가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축제와 행사, 무장에 데크길,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심사지구 상인들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재 수립하고 무장에 데크길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등산 관문’으로 주목받았던 중심사 상가거리가 타 지역 상가거리와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와 대대적인 홍보 활성화 등 전략 재수립이 불가피하다.

무등산상가거리 김동훈 상인회장은 “중심사 지구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매, 음식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방이나 숙박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업종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지구단위 계획을 재 수립해 중심사지구를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가능지역으로 변경하고 불허 업종은 고시해 시대 흐름에 맞는 업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국내·외 상가지구를 벤치마킹해 관광객들이 먹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명소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코로나 이후부터 20·30대 청년들과 장년층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낮은 야산이나 데크길을 찾고 있다”며 “중심사지구 주변에도 둘레길이나 데크길을 만들어 노약자, 장애인 등도 차별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명규 교수는 24일 “오랜 전통을 가진 중심사 지구만의 축제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별개로 상인회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행사를 준비해줘야 한다”며 “해외와 국내 상가지구를 직접 방문, 다양한 사업, 축제 등을 벤치마킹해 관광·등산객이 즐길 수

전문가들 또한 버스 회차·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교체해 지속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층을 아우르는 홍보·마케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회차·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교체해 관광·등산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의회 박종균 의원은 “현재 중심사 상가 주차장은 면적이 적어 시민들과 상인주인들이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김영미 교수는 “최근 MZ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등산’을 활용해 다

양한 홍보 마케팅과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을 준비해 상가거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시와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음식과 차별화된 상가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임채민 기자

광주 경찰, 전세대출 사기범 무더기 검거

브로커 등 4명 사기 혐의 구속
가짜 서류 신청 보증금 가로채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엄정 대처와 함께 경찰 전담반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 경찰이 전세대출 사기범들을 무더기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가짜 서류로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A씨(21)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모집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6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

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가짜 서류로 신청해 받아 60여억원(추정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브로커들은 일반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략 10%의 수익을 나누겠다고 꼬드겨 가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다. 명의 대여자들도 브로커들이 허위 전세 대출을 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대출이 모바일 메시지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명의 대여자의 신원으로 가짜로 만들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이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105명의 수사 대상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범행 기담 여부를 가릴 예정이어서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환준 기자

‘공립유치원 전환 비리’ 경찰, 시교육청 압수수색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24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공립형 전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정탁과 함께 최영환 당시 현직 시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다른 사립유치원 운영자 B씨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최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의 사립유치원은 공립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실제 공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김혜린 기자

환경미화원 채용 뇌물수수 공무원 2심도 실형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인척이자 전직 언론인 B씨(64)에게도 원심 형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받았고 B씨는 브로커에게 채무 2,000만원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미화원 응시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고 시험 전 이들에게 정탁했고 응시자는 실제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환준 기자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테크

조달청등록업체

- 01 **화장실 칸막이**
-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 03 **벽천장용 흡음재**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